

녹록지 않은 '이낙연의 시간'

전남권 의대·재난지원금 등 현안 주도...공감 얻지 못하는 미지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각종 난제들과 마주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구축기간인 '이낙연의 시간'이 시작부터 녹록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 대표가 각종 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것인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지원 문제와 관련, 대권 티켓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분명한 대립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권 후보 시절부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국민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며 충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설전을 벌여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일각까지 정책 노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때이른 대권 경쟁 구도는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얼마나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논의'를 골자로 하는 '의정 합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요구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합의는 전남의 숙원이었던 의대-대학병원 설립 사업에 일정 부분 차질을 불러올 전망이다. 전남지역 국회 의원들도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론 애가 타는 분위기다. 전남 지역 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역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하지만 의정합의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전남에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이낙연 지사의 고향이자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 사업이 기약없이 표류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황제후가' 의혹도 야당과의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에게 악재다.

이런 가운데 당 내외에선 이낙연 대표가 중도 확장 메시지를 통해 당의 안정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두 축으로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기조를 관철시켰고 코로나 19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극한 대처로 치달았던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각종 현안을 큰 문제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특히, 당의 기조를 진보에서 중도·실용 방향으로 끌어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재난지원금 '이재명의 소신'

당정 선별지급 방침에 "수용하지만 배제에 의한 배신감 클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당정의 선별지급 방침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경각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還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그는 이어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도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할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글은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원칙에 따라 '당정의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글로 파문이 커지자 이날 정세균 총리의 선별지원 방침이 발표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현 정부를 겨냥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 등 여론 내부에서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가감없이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글은 결국 당정협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적절성 문제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가 선별리 나설 경우, 여론 내 분열 및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6월 25일 무안군 삼합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 한상원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성공 기원' 손팸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국 유일 의대 없는 전남 민주당에 의지 있나 없나

정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의 진통 끝 협상을 거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강화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신설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영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해당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원점으로 되돌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지난 1982년의 의대 설립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대선 주자마다 전남 의대신설을 공약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도 이유였지만 정권 차원의 약속 이행 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 환경이 가장 뒤쳐진 지역이 됐다. 이는 각종 지표로 증명된다.

우선 의사 수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전남은 1만 명당 의사 수가 25.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4명이 적다. 치료가능 사망자 역시 10만명당 54명으로서 서울 대비 10명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칭하는 응급 의료취약지 전국 99개 시·군 가운데 17%는 전남 17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전남 276개 유인도 중 60%인 166개 섬은 의료기관조차 없다.

■전남 의대·부속병원 왜 필요한가

- 1만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보다 4.4명 적고
- 치료가능 사망자 10만명 당 54명...서울 44명
- 65세 이상 비율 23%·장애인 7.5% '평균 상회'
- 매년 78만명 타 시·도 의료서비스 이용
- 진료비 1조3000억 여의 지출
- 유인도 60% 166개 섬 의료기관 없어
- 전문가 "의료 취약지 의사 최대 8700명 부족"

이동하고,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역외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코로나 19사태에서 위중 환자 발생 때 광주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전남의 열악한 실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 의사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달 3일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취약지 보건 의료·감염병·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시·도별 부족 인력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당시 '코로나 19시대의 의사 인력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의료이용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하면 205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 늘려야 적정 공급이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주장은 향후 30년간 모두 4만5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적정하다는 것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겠다'는 당정의 애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20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내포안에서
싹쓰리
취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2020. 09. 14 ~ 09. 25.

<http://www.greencarjob.co.kr/>

온라인채용 박람회 참여방법

온라인채용박람회 안내

Stage 1 원하는 채용기업 확인

Stage 2 채용 서류 제출

Stage 3 영상 면접 제출(1차)

Stage 4 실시간 면접 진행(심층)

주최 **광주광역시**

후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IGA** 광주그린카터진원원 **K** 국제커리어센터

후원 **광주광역시**